

#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6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8월 15일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조광\_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기억과 역사해석
- 동일한 사건, 상이한 기억의 현장
- 상이한 기억을 드러내는 역사의 물길
- 역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변곡점 만들기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조광\_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기억과 역사해석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연구이다. 역사적 사건은 일회적이며 반복 불가능한 객관적 사건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역사를 인식하는 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뒤따르기 마련이기에 역사는 사건과 해석의 결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존재 확인 방식은 개개인의 기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한편 개인이 갖는 기억의 많은 부분은 사회의 틀 안에서 형성된다. 즉, 개인의 기억은 그가 속한 시대의 언어와 사건에 대한 해석, 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역사는 파편화되어 있는 개인의 지나간 기억들을 집단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면서 개인의 기억을 사회가 선택한 기억과 동화시키고 이를 다시 되살리는 기전을 작동시킨다.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사회가 개인의 기억을 선택하고 강화한다는 데 있다. 이는 사회가 개인에게 특정한 것을 기억하거나 망각하게 하도록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가 주입하고 되살리는 기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억은 유전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도 사회적으로 상속받은 기억을 갖게 된다. 그들의 기억은 사회와 역사가 만들어 낸 집단의 기억에 의존한다.

이렇게 본다면,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 기억은 어떤 의미로도 개인적 기억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개인의 기억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사회적으로 활용된 각종 상징과 스토리 그리고 이를 저장하고 전수하는 사회의 선택적 수단이 만들어 낸 산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런 점에서 개인의 기억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일반화된 심성(mentalité)의 속성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의 기억에 기반하여 형성된 심성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2023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주년이 되는 해이며, 곧 다가올 2025년은 그 종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해가 된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사건에 접근하는 길은 각종 행사와 상징 및 연구 등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 안에는 선택된 기억과 주입된 감정, 부과된 의미 등과 더불어 암묵적 결심이라는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각 나라의 기억이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함께 경험한 전쟁에 대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기억을 회생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신냉전적 기류의 강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의 통일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도 평화헌법의 재해석을 시도하면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올 동북아 균형의 변화가 예견되는 등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이 지니는 의미가 한층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리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 동일한 사건, 상이한 기억의 현장

제2차 세계대전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났다. 이 사건은 세계사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었고, 이후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전쟁을 끝낸 이 사건은 동아시아 각 나라에서 개인의 기억이라는 차원을 넘어 집단의 기억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날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시게미쓰 마모루 외무상

우선 한국은 이날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다. 북한도 이날을 ‘조국 광복의 날’로 부르며 국가 명절로 기념한다. 남북한 모두가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광복이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이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전쟁의 극복 또는 승리의 주체 설정과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집단 기억의 결과로 발생한 남북한 간의 간극은 아직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을 극복한 중화민국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한 다음 날인 9월 3일을 ‘군인절’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이날을 항전 승리기념일이자 그 승리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였던 타이완이 광복한 날로 기억한다. 그러나 국가기념일보다는 한 단계 낮아 공휴일에서도 제외되는 절일(節日)로 기념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건국된 직후부터 8월 15일을 승전기념일로 기념했다. 그 후 중국은 2014년부터 이 기념행사의 날짜를 9월 3일로 변경하여 국가기념일인 ‘전승절’로 기억하고 있다.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일본은 남북한이나 중국과는 다른 입장에서 이날을 종전기념일로 기억했다. 일본은 전쟁을 도발하여 동아시아를 전장으로 만들고, 동아시아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원죄가 있기에 그 기억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 정부는 1982년 이날을 ‘전몰자를 추도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날’로 지정했다.

이렇듯 동아시아의 각국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자신들이 걷고자 하는 역사의 방향에 따라 자신들의 집단 기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라는 인류의 절대가치에 반하는 현상을 일으키기도 했다.

## 상이한 기억을 드러내는 역사의 물길

개인의 기억은 사회화 과정을 거쳐 집단 기억으로 바뀐다. 이 집단 기억은 단순히 과거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도 제2차 세계대전 종결이라는 사건을 각기 다르게 해석해 왔다. 그리고 그 해석과 기억은 미래를 향한 오늘날의 소망을 품으면서 역사의 물길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집단 기억은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동시에 사회가 지향할 바에 대한 강력한 추동력을 주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현대사에서도 전쟁에 대한 기억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검증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에서는 전쟁 종결에 따라 남북 분단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 종전

을 가능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남북한 간에는 광복의 원인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빨치산 투쟁이 일제에 대한 궁극적 승리를 가져왔다고 단언했다. 이는 전쟁의 종결, 즉 민족 해방의 주체가 자신들이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 같은 역사해석은 1945년 종전 직후 해방자로서 붉은 군대[赤軍]의 역할을 강조했던 그들의 기록과는 거리가 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해방이라는 사건이 일제에 대한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 투쟁의 산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는 그 투쟁의 과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이 같은 해석은 그들이 사용하는 역사교과서에 언급된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관한 내용 분석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내용 분석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역사해석의 특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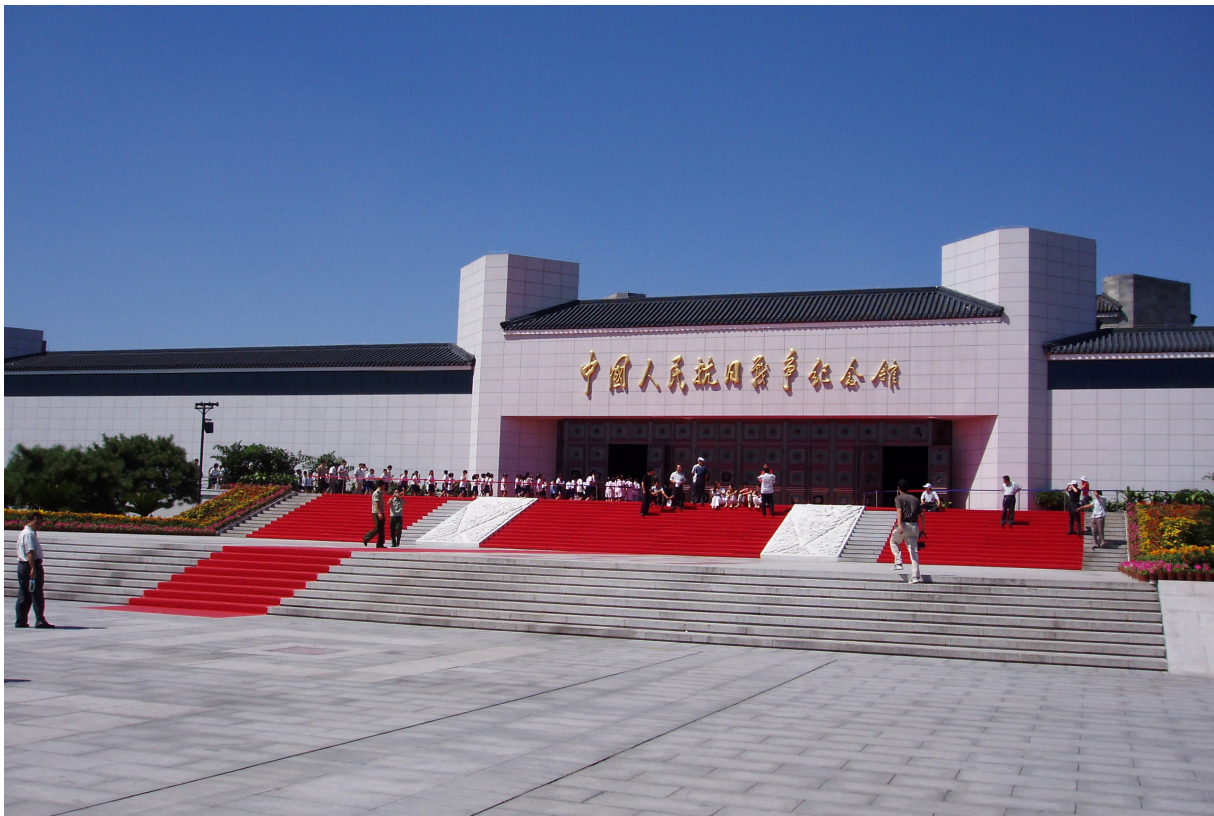
북한은 이러한 해석을 통해 자신들이 제시하는 이념과 정권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체를 보존하려는 강력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신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미래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했다. 여기에 해방 이후 새롭게 형성시킨 집단 기억이 작동하고 있다.

반면 전쟁 종결에 대한 남한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 경향은 일제에 대한 연합국의 승리와 국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 해방과 독립된 국가를 건설하는 계기로 작동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방과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남북한 학계는 전후 일본을 바라보는 방식에서도 일정한 특징을 보인다. 북한은 계속해서 종전 이후의 일본을 제국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못한 침략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대항 의지를 고취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남한은 1965년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과의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남한 학계에서는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책임, 전쟁 발발과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 조약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 남한 학계와 시민사회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 전개 과정에서 한국인이 받은 피해의 복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겨져 있다고 본다.

중국은 전후 1960~19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이념 투쟁이나 국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전쟁의 기억을 일면 봉인시킨 측면이 있었다. 그러던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을 본격적으로 소환한 시기는 1980년대였다. 중국에서는 1982년 6월 25일에 공개된 일본 검정 역사교과서 문제의 발생을 계기로 그동안 봉인되었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중국은 일본의 전쟁 기억 방식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1987년에는 항일전쟁 5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세웠다. 이후 중국 전역에 걸쳐 성급(省級) 단위별로 항일전쟁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이 전시관의 공식 명칭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전쟁의 종결은 중국 인민들의 항전 결과로 강조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에서는 전쟁을 기억하는 각종 행



베이징에 세워진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



난징시에 있는 난징대학살기념관

사를 개최하고 특정 기관을 설치하여 전쟁 종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급해 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응 방법은 2010년대를 전후하여 다시금 강화된 형태를 띠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승전을 기념하는 날을 법정기념일로 승격시켜 전국적 규모의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같은 해부터 12월 13일을 난징대학살 희생자 국가 추모일로 지정하고, 대학살을 기억하는 대규모 전시관을

세웠다.

이러한 중국의 기념을 통한 기억 행위는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발생하고 일본 역

사교과서 문제가 가열됨에 따라 드러난 대응 현상이었다. 또한 이는 패전국이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책임에 대한 중국 측의 분명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념을 통해 일본은 가해국이고 패전국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동시에 공산당이 중국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박물관이나 기념관 설립은 인민들의 사회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이나 난징대학살기념관의 전시 개념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원래 전시관의 전시 개념은 그 사회나 국가가 지향하는 바와 합치되게 마련이다. 중국에서도 곳곳에 건설된 항일전쟁 기념관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일본을 이겼다는 경험과 기억을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온 인민이 힘을 합쳐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자는 미래의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중화민국 정부, 곧 타이완 정부에서는 공산당의 영도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전쟁은 장제스 총통이 이끄는 국민당의 영도 아래 수행되었고 승전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63년부터 매년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로 기념하면서 전몰자에 대한 추모행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추모행사나 평화에 대한 기원이 전쟁을 일으켜 평화를 파괴했던 일본의 책임을 다짐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2015년에 발표된 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전후 70주년 담화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 담화에서 아베는 전쟁의 원인에 대하여 모호하게 언급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희생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아베의 담화문에는 “죄 없는 이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라며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 담화의 흐름을 볼 때 전쟁을 일으킨 주체인 일본이 자신들의 책임을 온전히 되돌아보고 평화를 건설하려는 다짐을 드러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일본은 전쟁 종결이 전 세계에 탈식민지화를 불러왔던 상황을 강조한다. 이는 일본이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나 식민지 지배를 호도하고,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던 구미 열강들을 공격함으로써 반식민주의 해방에 일조했음을 은연중에 제시하려는 복선이 깔려 있는 태도로 지적된다. 특히 2012년 이래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창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이 진정한 평화 건설의 다짐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에 대한 각국의 각기 다른 해석과 그 해석에 따른 현실 정책들은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 역사를 움직이는 새로운 변곡점 만들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전쟁과 종전에 대한 기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기억으로 변모되었다. 집단 기억은 한 사회 내의 집단이 갖는 기억으로, 다양한 문화적 매개체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재현되고, 공유되고, 논쟁되고, 억압되고, 협상됨에 따라 집단 기억은 그 진실성을 강화해 가면서 힘을 얻는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선택되고 강요될 수 있다. 집단 기억은 역사를 해석하는 데 있어 편향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선택되고, 공공의 기억으로 재현된 기억은 다른 기억을 억압하고 침묵하게 만든다. 그 결과 한중일 세 나라가 공통된 사건을 두고 상이한 집단 기억과 해석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 기억은 애국주의 역사교육으로 포장되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인식 차이는 역사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세 나라가 보여 준 종전에 대한 집단 기억은 각국의 현대사가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역사해석의 결과를 드러내게 되었다. 물론 이렇게 제시된 각기 다른 해석을 무조건 깎아내리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그것은 모두 부분적 진실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 기억은 사회 구성원의 정체성과 공통된 감정을 형성시키며 국가적 이익이 무엇인지에 관한 집단적 견해를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각국은 거기에서 발전 방향을 가늠하고 또 다른 역사의 변곡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추동력을 얻으려 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 기억의 결과물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경 범위를 벗어날 때, 상호 간의 관계는 악영향을 받게 된다. 거기에는 국사(國史), 즉 내셔널 히스토리(national history)의 함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바라보면서 각국의 집단 기억을 다시금 검토해 보는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일반적으로 집단 기억은 부분적 진실에 근거하고 있기에 그 결과물을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기억의 가치 자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인 집단 기억들도 이제는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보편적인 가치, 곧 평화와 자유, 인권, 민주 등의 가치관에 입각한 담론들이 되어야 한다.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서도 동아시아 각국은 역사를 바로 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전개해야 하고,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참고문헌 |

- 김가영, 2016,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독일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비교분석」, 『역사교육연구』 24, 151~211쪽.
- 박찬승, 2016, 「동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의 기념과 집단 기억」, 『동아시아문화연구』 64, 13~50쪽.
- 서민교, 2015,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의 침략전쟁의 기억과 UNESCO 문화유산과 기억유산 등재 문제」, 『내일을 여는 역사』 60, 125~147쪽.
- 조은경, 2014, 「한·중 항일기념관의 전시 내러티브와 동아시아 역사인식: 독립기념관·중국인민항일전쟁기념관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197~233쪽.
- Hock, David Koh Wee, ed., 2007, *Legacies of World War II in South and East Asia*,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조광 |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 전공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일본 아쓰미재단 ‘국사 간의 대화’ 한국 측 대표, 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학장, 전 한일역사공동위원회 한국 측 위원장,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